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0지역언론 톺아보기\_10월3주(1)>

## ‘미 8부두 세균실험실’ 문제 국감서 나와도 지역언론 관심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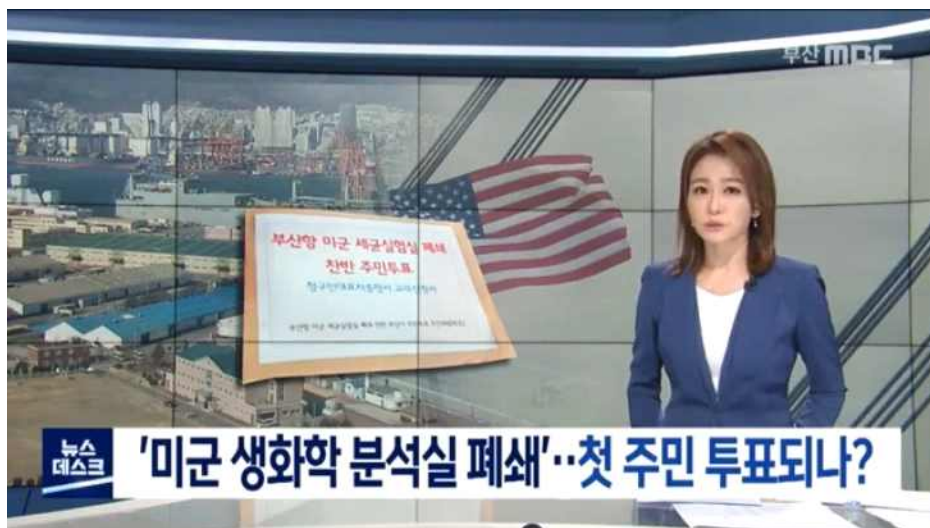
2019년 3월 부산일보 보도로 부산항 8부두에 맹독성 생화학 사료가 반입된 사실과 주한미군의 세균무기 실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일 태풍 때는 8부두 내에서 장시간 사이렌이 울려 주민들이 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폐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나섰는데요, 시민단체와 함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부산시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9년 이전에도 맹독성 샘플 반입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극소량이라도 유출된다면 시민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사안이지만 지역 언론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주민투표 움직임과 국감 내용을 모두 보도한 것은 부산MBC입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 9월 24일 <‘미군 생화학 분석실 폐쇄’..첫 주민투표되나?>(이두원 기자)에서 추진위의 주민투표 청구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부산시가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전례를 전하면서도, 지방자치법 9조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 지자체 사무’라는 조항도 함께 제시해 투표 성사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이어 10월 8일에는 단신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수용해야”>에서 수용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9월 24일 부산MBC 뉴스데스크



△ 10월 8일 부산MBC 뉴스데스크

10월 8일 <미군 맹독성 샘플 반입 '두 차례' 더 있었다>(이두원 기자)에서는 8부두에 생화학 물질 반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2019년 이전에도 '두 차례' 더 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이재정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정부측은 독성을 제거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극소량만 들어왔는데 독성이 제거됐겠냐는 전문가 지적, 또 정부가 독성 제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10월 13일 <부산항 8부두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불발>(단신)에서 부산시가 주한미군 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지방사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지역언론들은 관련 내용을 사진기사 또는 단신으로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부산일보는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고, 9일 사진기사 <세균무기샘플 반입 폭로 기자회견>로 추진위의 주한미군 생화학물질 3차례 반입 규탄 소식을 전했습니다. KBS부산은 10월 4일 <"미군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필요" 추진위 발족>(단신), KNN은 15일 아침뉴스에서 <"미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무산 반발">(단신)을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추진위는 미군이 수시로 맹독성 사료를 들여온 점 등 주민 불안이 크다며 민간주도로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맹독성 물질 반입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고 기후 재난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한미군 부대'라는 이유로 정보 접근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역 언론이 지역 주민의 우려를 적극 전하고 각종 의혹을 공론화해 미군의 일방적인 행보에 제동을 거는 역할에 나서기를 주문합니다.

<끝>